

2012 지역발전 동향 및 전망

이 소 영 (수석연구원)

2012 지역발전 동향 및 전망

이 소 영 (수석연구원)

1. 지역발전의 동향 분석

1) 지역발전의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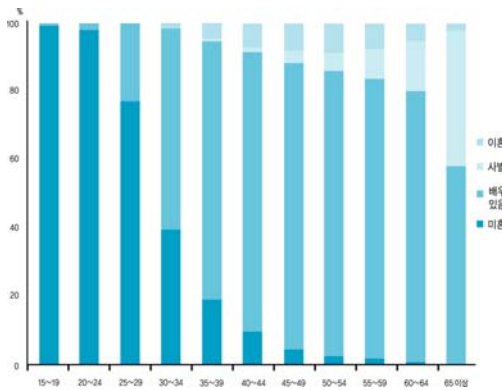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역발전 이슈

- 인구 고령화와 관련하여 UN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등 3단계로 구분(세타 후미히코 외, 2006)
 -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일 때의 사회를 가리키며,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을 의미
 -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2000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은 2000년에 노년인구가 15% 상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기준 총조사인구 4,858만 명 중에 65세 이상 인구는 542명으로 총인구의 11.3%로 고령화사회단계임
 - OECD 국가 대부분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70~80년이 소요되며, 일본은 24년이 걸린데 반해, 한국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는 저출산 현상에서 비롯된 것임
 - 1970년 여성 1인 합계출산율이 4.53명이던 것이 2005년 1.08까지 저하되었는데, 이는 일본(1.29)보다 낮고 선진국 평균인 1.56보다도 낮은 수치임(박경애,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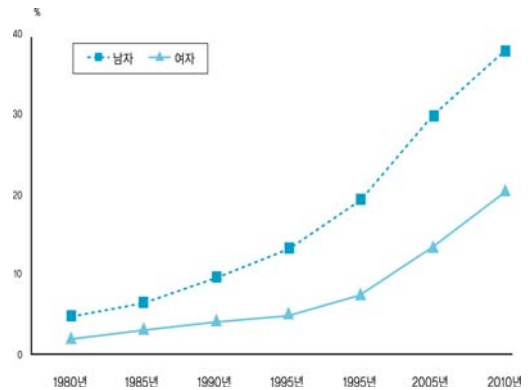
1. 지역발전의 동향 분석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0대 미혼율은 2005년에 비해 7.6% 증가
 -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를 보면 기혼 57.7%, 미혼 30.6%, 사별 7.6%, 이혼 4.0% 순임
 - 30대 연령 미혼율은 29.2%로 2000년 13.4%, 2005년 21.6%에서 지속적 증가

〈그림 3〉 15세 이상인구 혼인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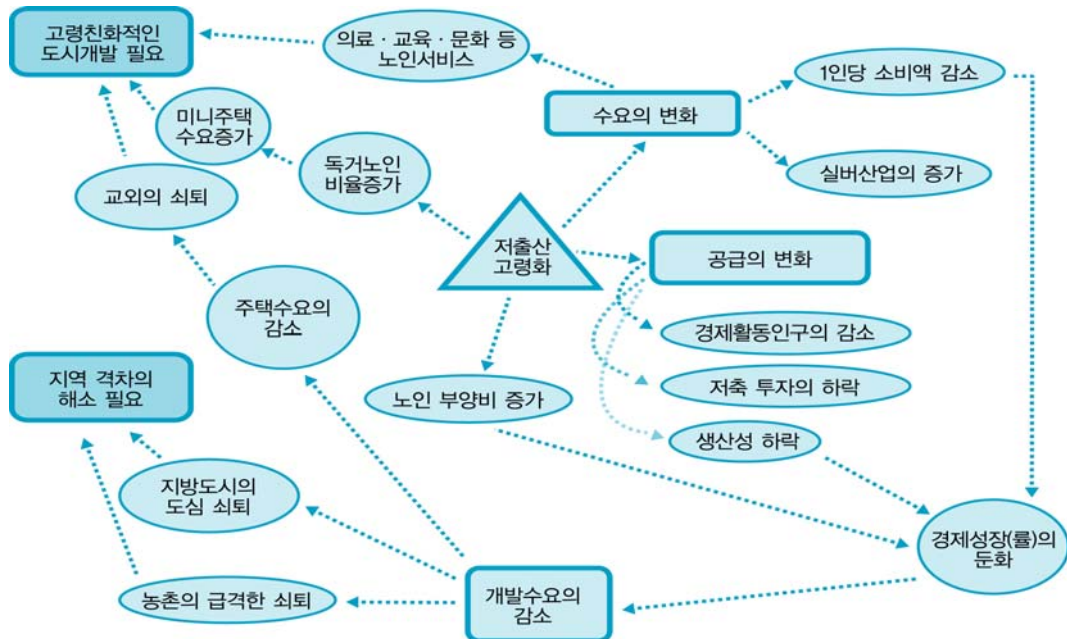


〈그림 4〉 30대 인구의 성별 미혼율



- 고령화로 인한 개발수요 둔화로 실버산업과 같은 새로운 영역이 대두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경제 전망과 이슈'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2.4%가 2012년 경제성장률을 3.5% 이하로 예상
 - 기타 관련 연구기관의 2012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한국개발연구원 3.8%, 산업연구원 3.7%, 삼성경제연구소 및 LG경제연구소 3.6%로 전망하고 있어 2011년 대비 둔화 전망
-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공간적으로 개발수요 감소 초래
 - 개발수요의 감소는 지역별로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데, 지방도시의 경우 도심 쇠퇴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농촌의 경우 급격한 지역쇠퇴를 야기
- 개발수요가 감소하는 대신 지역 내부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 및 사회복지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 증대 전망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쇠퇴에 대응한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 마련 필요

〈그림 3〉 고령화가 사회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자료: 김현호 등(2010:63)

□ 지역간 블록화 경향에 따른 지역발전 이슈

- 글로벌 경쟁력과 정치적 자율성을 가진 대도시권 지역(Global City-Region)이 국가를 대신하여 새로운 경쟁 주체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Scott, 2001)
 - 글로벌 도시지역은 규모의 경제외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대 효과, 고밀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등으로 인한 학습 및 혁신효과, 산업체계 내에서의 기업간 전호방 연계효과 등 많은 긍정적인 외부효과 창출
- 최근들어 도시화의 양상이 다수의 중심도시를 보유하고 고도로 글로벌화된 거대도시지역과 네트워크화된 지역도시로 더욱 집중되는 도시지역시대(urban regional age), 또는 지역 도시시대(regional urban age)가 도래를 주장(Soja, 2008)
 - 도시의 성장방식도 대도시화에서 지역도시화로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함

1. 지역발전의 동향 분석

- 오마에 겐이치는 지역국가(region state)가 국경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단위라고 주장
 - 대체로 500만명에서 2천만명 사이의 인구조 소비재 상품의 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를 지역국가로 파악
- 새로운 경쟁력 강화, 부의 창출을 위한 성장엔진을 갖추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광역발전권 지향 증대
 - 미국의 메가 지역(mega region), 프랑스의 6대 광역권, 일본의 8대 광역지방계획 등 강력한 경제블록 형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제블록내 지역간 공동발전을 촉진시키는 전략 채택
 - 선진국의 경제공간 조직은 국가 차원에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대학을 보유하는 동시에 이들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특징을 지니며, 다수의 거대 지역경제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
 - 경제블록의 우수한 자체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이 협력의 핵심주체로 자리매김
- 우리나라도 생활 및 생산공간의 광대역화 추세에 부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모델로서 광역경제권 전략을 채택
 -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제대로된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경제권과의 협력은 차치하고 지역내 기초자치단체간 협력도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한 형편
- 지역 블록화 및 상생발전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먼저 지역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주도의 발전정책이 확대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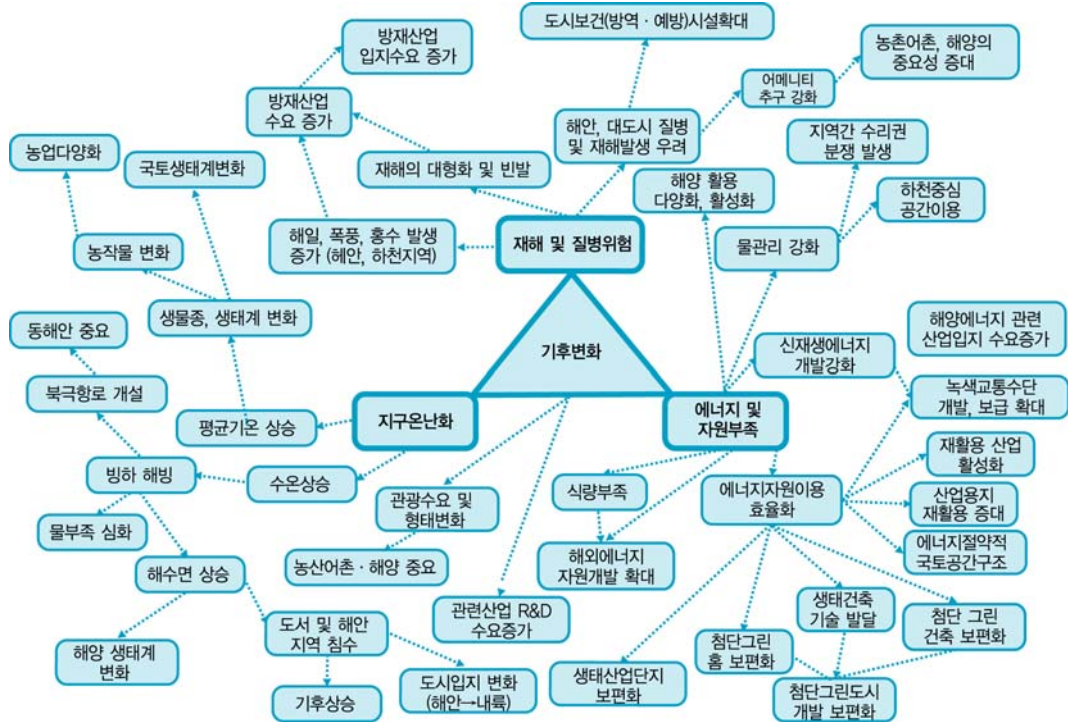
□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지역발전정책 이슈

- 세계적인 기후환경변화에 따라 한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또한 한반도의 기온상승을 예측하고 있음(기상연구소, 2008)
 - 20세기 말 대비 21세기 말 기온변화는 한반도 전지역에 대하여 4℃ 상승 전망(남한은 3.8℃)
-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의 경우(IPCC, 2007), 20~30년 내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아 홍수와 산사태를 증가시키며 수자원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

- 특히 큰 호수 유역의 담수 사용의 가능성이 감소하여 물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며, 태풍 및 홍수의 증가로 인하여 수해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각국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려는 완화전략을 채택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지역적 취약성을 측정하여 취약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적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개념으로 삼고, 이를 도시 및 지역에 적용하고자 한 노력들을 살펴보면, 생태도시, 환경친화적 도시, 녹색도시 등 다양함
 - 1990년대 이후 교토의정서 채택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의 문제제기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저탄소도시, 탄소중립도시, 탄소 무배출 도시 등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최근에 생겨난 도시개념들은 기존 환경, 경제, 사회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시개념들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되, 주로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의 국내 대응동향 또한 주로 온실가스 저감위주의 대책들로 추진되어 온 경향이 있음
 - 이는 정부의 종합대책 중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공간계획요소 측면에서도 주로 탄소 저감, 즉 기후변화 완화전략에 치중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개발전략 중 치수, 방재, 녹지, 기반시설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대비한 적응전략들이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후변화 대응은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따라 수립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정책 및 제도를 지역 여건에 따라 적용시켜 왔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미
 - 지역의 기후변화대응 지역개발정책이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
 - 한국의 시민사회가 성숙되었다고는 하나,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 환경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는 한편, 시민사회가 지역개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1. 지역발전의 동향 분석

〈그림 4〉 기후변화의 공간적 영향



자료: 이용우(2009:70)

□ 다문화 사회 도래에 따른 지역발전 이슈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인구는 2005년에 비해 148.2% 증가한 59만 명으로 총조사 인구의 1.2% 차지
 - 총조사 조사대상 외국인(3개월 이상 거주)은 97만명으로 추정
- 시도별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31.1%로 가장 많으며, 서울 27.6%, 경남 6.9% 순임
 - 전체 조사 외국인의 63.9%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
 -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에 5.0%로 가장 많이 거주하며, 시군구별 총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영등포구가 5.5%로 가장 높음

〈표 1〉 총인구 중 외국인 비율 상위 시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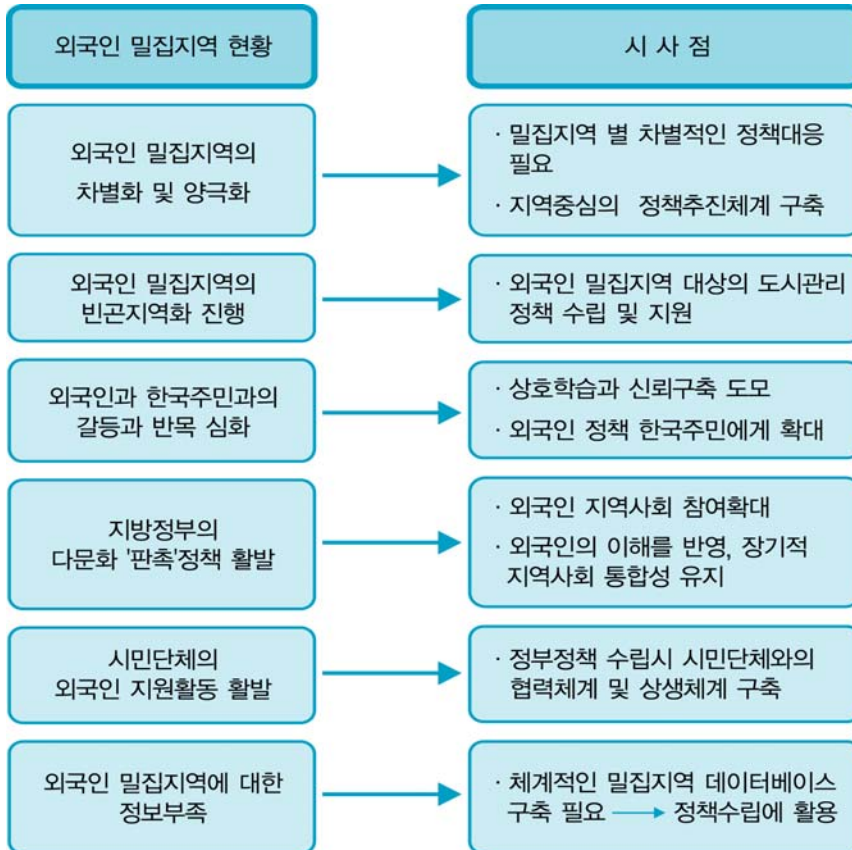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순위	시군구명	총인구	외국인 인구		순위	시군구명	총인구	외국인 인구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전국	48,580	590	1.2	6	경기 안산시	729	30	4.1
1	서울 영등포구	396	22	5.5	7	부산 강서구	54	2	3.9
2	전남 영암군	59	3	5.2	8	서울 구로구	417	16	3.9
3	서울 금천구	243	12	5.0	9	경기 시흥시	407	14	3.4
4	서울 용산구	227	10	4.5	10	서울 중구	121	4	3.2
5	충북 진천군	62	3	4.2	11	경기 김포시	224	7	3.2

-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이 35%로 가장 많이 거주하며, 중국 15.8%, 베트남 10.1% 순임
- 한국의 외국인 유입 현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적인 추세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
 - 지난 15년간 추세로 볼 때,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전문인력 등 모든 유형의 외국인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의 외국인 비중은 2020년에는 5%에 이를 것으로 추산
- 국내 외국인 거주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민족별 주거지 분화가 확대될 것임(박세훈 등, 2009)
 -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단순노동자들과 방문취업제를 통해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들의 공간분포인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 온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단순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대도시 외곽지역 특히 산업단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으나,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제조업보다는 저차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도심지역에 입지
-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저임금 노동력 확보 및 개방적 문화로 인한 해외투자 확대 등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소수민족집단 관련 지하경제 활성화, 밀집지역 형성으로 인한 빈곤, 실업 등 사회문제 발생 등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
- 국내 외국인 거주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 무상 교육, 외국인 민원 서비스 개선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적 서비스 지원은 강화되고 있으나,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공간적 정책 부족
 - 외국인 거주밀집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우범화 방지, 새로운 지역명소화 전략 등의 지역발전정책 필요

1. 지역발전의 동향 분석

〈그림 5〉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및 이슈



자료: 박세훈등(2009: 194)

2) 2011 지역발전 동향분석

□ 안전 대한민국 구현

- 신속한 재난대응, 신종재난 위험대비 철저 등 선제적 재난관리를 강화하고 범죄,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대한민국 구현
 -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및 시설별 분산복구에서 피해지구 중심 종합복구 전환
 - 재난징후 사전포착·대처 시스템 강화

- 침수취약지역 배수성능 개선 및 폭설 취약구간 특별관리, 지진해일 침수예상도 작성을 통한 지진해일대응시스템 구축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및 보·차도 분리, 보도 확장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연평도 피해복구 및 주민생활 안전지원을 위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 관련 언론 이슈

- 3월 11일에 일어난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지진/해일 등 자연재난에 대응한 비상체계 구축에 관한 관심 증대
- 7월 28일 집중호우에 따른 우면산 산사태와 도심기능 마비로 방재청과 재난안전실로 이원화되어 있는 자연재해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 이밖에 2011년 6월, 서민 재난취약지역 11개소 재난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이 언론에서 이슈화

□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 중소기업 취업, 마을기업 육성 등 안정적 일자리 조성
 - 청년 희망일자리 1만개 창출
- 지역특화발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 지역 향토자원 관리체계 확립 및 우수자원의 사업화 지원
- 특수상황지역개발
 - 접경지역의 핵심거점지역 중심의 평화누리길 조성
 - 대학,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미군반환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 지역특성을 살린 10대 거점도서 개발
-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 4대강 등 생활밀착형 지역 녹색기반 확충(국민참여형 녹색숲 조성사업, 자연체감형 자전 거길 조성 등)

1. 지역발전의 동향 분석

- 자전거 이용 활성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자전거도로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 녹색생활 실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공중화장실 중수도 처리시설 시범사업)
- 2011년 6월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권역별 통합발전, 연계협력 및 이에 대응한 자치단체의 활동 활발

☞ 관련 언론 이슈

- 재래시장 및 서민금융 활성화,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친서민정책으로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이슈화
 - 2011년 5월, 16개 시도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2011년 7월, 새마을금고 설립요건 강화
 - 2011년 7월 16개 시도 10대 생활물가 공개
 - 2011년 8월, 전통시장 9곳에 15억 3천만원 투입, 시장 홍보
- 도서 및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지역중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원대책 이슈화
 - 2011년 6월, 찾아가고 싶은 섬과 평화생태마을(접경지역) 지원사업
 - 2011년 6월, 서해5도 중합발전계획 마련
 - 2011년 7월 28일,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확정
- 지역간 상생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한 협의체 및 공조체제 강화
 - 2011년 6월, 5+2 권역별 연계·협력사업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광역위)·중앙부처가 함께하는 5+2광역경제권협의체 가동
 - 2011년 11월 우리 지역의 살길을 찾자 대구·경북 2011 그랜드 포럼 개최

□ 공정하고 품격있는 사회 조성

-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특화발전 지원
- 품격있는 생활환경 조성
 - 옥외광고물 제도 선진화
 -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확산
- 국가브랜드의 해외 수출
 -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추진
- 국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 관련 언론 이슈

- 다문화 가정 무상 교육, 외국인 민원 서비스 개선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적 서비스 지원 일색의 정책에서 다문화 지역 지원으로 정책 다변화
 - 2011년 4월,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지원 및 취약계층 밀집지역 대상 희망마을사업 25개 선정
-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세계화 사업 등 국격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지속적 추진 이슈화
 - 2011년 5월, 10개 시군구 대상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 2011년 5월, 지자체 국제협력담당관 워크숍_지역브랜드 세계화사업
 - 2011년 6월,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추진

1. 지역발전의 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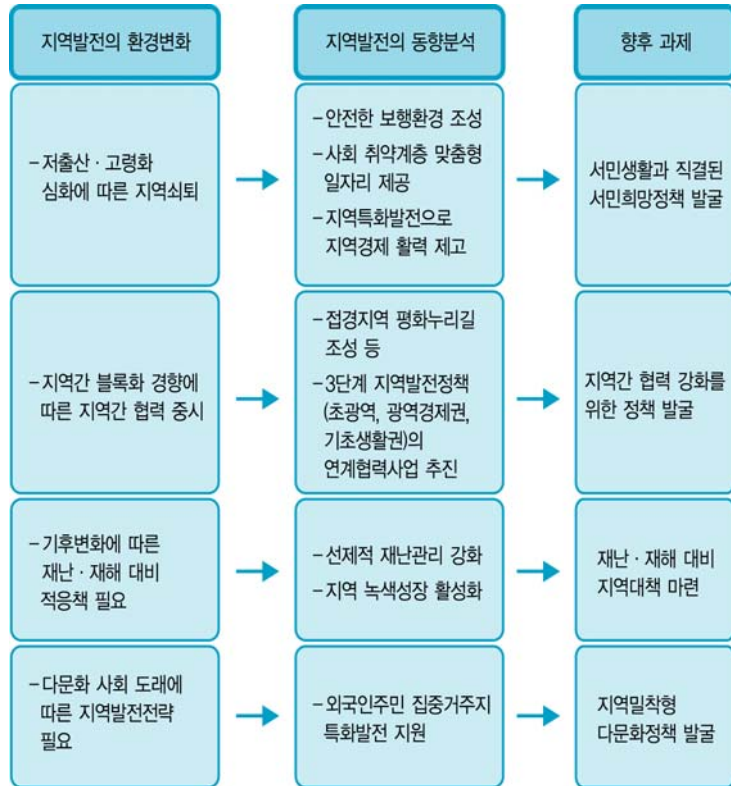
〈표 2〉 2011년 언론(신문기사)에서 이슈화된 지역발전분야 주요 정책

일시	내용
2011.3.20	기업의 투자유치 독려를 위한 새만금사업설명회 개최
2011.3.25	지진/해일대비 발전소 재난대응체계·비상대응 절차 점검
2011.3.31	구제역차단 총괄 지휘 재난안전대책본부 활동 마무리
2011.3.28	온천법 개정에 따른 전국온천 담당공무원 연찬회
2011.4.4	생활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지원
2011.4.8	서해5도를 포함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본격 추진
2011.4.11	내가 찾은 아름다운 우리마을 사진 공모전 개최
2011.4.14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 개최
2011.4.15	제3회 대한민국자전거축전, 4/16 상주 개막, 9일간 개최
2011.4.25	생활형 녹색성장사업 추진, 16개 시도별 1억 내외 지원
2011.4.26	정부통합전산센터, 지진대비 종합모의훈련 실시
2011.4.26	재해위험저감과 기후변화적응 아시아 리더십 개발교육실시
2011.4.27	지역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공표
2011.4.29	취약계층 밀집지역 대상 희망마을사업 25개 선정
2011.4.29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가결
2011.5.6	행안부-ICLEI(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녹색성장 국제연계
2011.5.11	10개 시군구 대상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011.5.11	여수엑스포 D-1년, 2012년 5월12일~8월12일 95개국 참여 800만명 관람
2011.5.18	지자체 국제협력담당관 워크숍_지역브랜드 세계화사업
2011.5.19	행안부-특허청간 지역자산 지적재산등록 MOU 체결
2011.5.19	16개 시도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2011.5.24	새마을 운동, ODA를 통해 세계와 공유하다
2011.5.27	서울청계광장에서 2011한마음 농특산품 직거래장터 개최
2011.6.1	투자유치 전략 모색을 위한 동북아시아와 새만금 국제포럼개최
2011.6.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발의
2011.6.7	행안부장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장점검
2011.6.9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추진

일시	내용
2011.6.10	찾아가고 싶은 섬과 평화생태마을(접경지역) 지원사업
2011.6.12	5+2광역경제권협의체 이달말 공식 출범
2011.6.23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마련
2011.6.23	정보화마을과 민원24 UN 공공행정상 수상
2011.6.27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추진 새마을운동 ODA
2011.6.29	서민 재난취약지역 11개소 재난환경개선사업 지원
2011.7.6	새마을금고 설립요건 강화
2011.7.7	2012 온천대축제 유성 개최
2011.7.1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확충방안 마련
2011.7.21	16개 시도 10대 생활물가 매달 공개
2011.7.28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확정
2011.7.29	자연재해는 방재청-사회재난은 행안부, 통합관리 절실
2011.8.3	전통시장 9곳에 15억 3천만원 투입, 시장 홍보
2011.8.3	밀양, 하동, 산청, 청도, 완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1.8.9	광주시 동구 등 4개 자치구 간 경계조정안 통과
2011.8.12	재난관리 개선 민관 합동 TF 개최
2011.8.18	중기청, 행안부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구축사업
2011.8.19	한국의 향토명품, 뉴욕 기프트 페어 참가
2011.8.22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 육성법 개정안 발의
2011.8.29	외통부와 공공행정분야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MOU체결
2011.9.6	시군구 통합기준 확정발표
2011.9.19	양구 두타연 평화누리길조성 현장 점검
2011.9.26	남한강 자전거길사업 현장 점검
2011.9.27	내년 예산안 SOC 22조원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2011.10.6	국토중주 자전거길 완공예정
2011.11.10	우리지역의 살길을 찾자 2011 그랜드 포럼 개최
2011.11.18	총리실 2012년 9월 세종시로 옮긴다

2. 2012 지역발전 추진방향 및 전략

〈그림 6〉 지역발전 향후 과제



2. 2012 지역발전 추진방향 및 전략

1) 추진방향

□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민희망정책 발굴

- 이명박 정권의 후반기인 2011년은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정책 이슈가 제기되기보다는 2011년 국정운영방향에 발맞추어 친서민형 지역발전정책이 두각을 나타내는 해였음
 - 이에 따라 지역발전정책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물가안정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된 초점을 둔

- 이명박 정권의 말기인 2012년에도 친서민형 지역발전정책의 지속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등의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예산안 편성은 일자리 예산이라고 한마디로 표현되었듯이, 신 일자리 개척과 일할 여건 조성, 일할 능력 제고 등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둠

□ 지역 협력형 지역발전정책 강화

- 현재 지역발전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5+2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으로 대변되고 있듯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산업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기초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수립으로, national minimum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나,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보충적, 보조적 기능으로 축소된 경향이 있음
- 지역간 연계·협력은 아래로부터의 경험 축적과 시스템 정립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바, 기초생활권 단위, 즉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기초생활권 → 광역경제권 → 초광역개발권 체계의 3차원 지역발전정책이 추구하는 지역간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실용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선도하는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면, 2012년 지역발전정책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기초자치단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발전으로 보완될 여지가 있음

□ 근린지구단위 녹색생활실천 및 재해방지 대책 마련

- 지역개발사업 단위는 넓게는 5+2 광역경제권의 단위에서부터 좁게는 마을단위 개발사업까지 공간적 범역이 다양함
 - 지역개발사업은 사업지구별로 범위가 다양하여, 좁게는 마을단위 개발에서부터 넓게는 초국가적 지역경제의 설정까지 가능
- 2012년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고, 실용정부의 정권 말기인 시점이어서 대대적인 지역개발사업보다는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공간적 범위인 근린지구, 즉 마을단위의 지역개발사업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2. 2012 지역발전 추진방향 및 전략

-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개발·실현할 필요
- 근린지구 단위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하여 마을단위의 자율적 주민조직(village development community)의 활성화 지원 방안 강구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관련 단위사업들도 근린지구단위 녹색마을 만들기, 방재 마을 만들기 등으로 마을단위 조직의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밀착형 다문화사회 육성

- 국내 외국인 거주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다문화 가정 무상 교육, 외국인 민원 서비스 개선 등 외국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지원은 강화되고 있으나,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공간적 정책이 부족
- 각 지역별로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므로 지역 여건에 알맞은 지역 밀착형 다문화 지역발전정책이 고려되어야 함
 - 외국인 거주밀집지역에 대한 생활여건개선 등의 다문화 지역정책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
- 특히 지역별로 명소화될 수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은 그 자체로 지역 명소로 자리잡아, 국격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추진전략

□ 지역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강화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마을기업 등 지역 공동체 사업 활성화 필요
 -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지역 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
- 2011년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서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었다면, 2012년 지역 일자리 사업은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기업 등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예정

- 마을기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역 공동체 강화의 목표 또한 추구하므로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사회적 가치도 달성 가능
- 그러나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수법으로 운영해야 하는 마을기업은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경험 및 역량 부족, 이로 인한 판로 개척 미진 등 한계점이 노출되어 있음
-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형성 되어 있는 마을기업의 선정·지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내에 다양한 업종의 마을기업이 발굴·육성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생성 전단계에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함
 -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마을기업지원센터 등을 구성하여, 마을기업 생성 전단계에 마을 리더들을 대상으로 인적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임
 - 마을기업이 형성되었을 경우, 마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전문성이 부족한 마을기업에 전문경영방식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의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마을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민간 기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등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쇠퇴지구 활성화

- FTA 등 경제개방으로 한 때 융성하였던 지역이 경기 쇠퇴 및 구산업 쇠퇴 등의 쇠퇴문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속출
 - 도시에서는 재래시장, 구상권, 원도심 등이 쇠퇴문제에 직면하여 있고, 농촌에서는 고질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상으로 활력을 잃은지 오래
- 각 지역이 처하고 있는 쇠퇴의 문제는 지역경제 침체 등의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범죄 증가, 민심 불안정 등 사회적 문제도 야기함
 - 쇠퇴지역에 대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역 전반의 경제성장은 단시간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쇠퇴지구별로 쇠퇴특성에 따른 처방이 필요함

2. 2012 지역발전 추진방향 및 전략

- 2012년 정책적 처방이 필요한 쇠퇴지구는 대형할인마트 등의 등장으로 고질적 위기에 직면한 재래시장 및 구상권, 신도시 개발 및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이유로 위기로 맞고 있는 원도심 지역 등을 들 수 있음
- 재래시장 및 원도심은 지역에 따라 공간적으로 같은 쇠퇴지구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쇠퇴지수를 개발하여, 쇠퇴지구를 진단, 가장 활력을 잃은 쇠퇴지구에 정책적 처방이 내려져야 함
 - 고질적인 침체지역의 경우, 정책적 처방은 종합적인 지역개발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겠지만, 한 때 발전했던 지구가 쇠퇴 일로를 겪고 있는 경우, 발전기반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어 발전 경로를 재설정해주는 것으로도 재활성화의 길이 모색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지역에 내재한 잠재력있는 특화자원을 발굴하여, 쇠퇴지구 활성화의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임
 -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는 2012년에는 주말을 이용한 국내 여행객이 더욱 증가될 전망이므로, 체험학습여행객을 타겟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자원을 상품화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나감
 - 외부 방문객 유치 뿐만 아니라, 로컬 푸드를 활용한 지역내 순환적 소비 시스템의 정착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할 필요도 있음
 - 새로운 시장을 타겟으로 한 새로운 명소(아침시장, 주말시장 등)를 쇠퇴지구내에 형성하여, 지구 활력을 재생시키도록 함

□ 시군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기반 정착

- 실용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지역간 협력적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이었음
 - 경제적 범위의 차이에 따라 공간적 층위를 나누어 3차원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였지만, 3차원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적 정착은 시군간 연계협력 활성화에 있음
-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적 경험과 협력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래로부터의 협력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위로부터의 정책결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도 스스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에 따라 동기부여되는 경향이 있었음

- 물론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은 재정적 지원에 따라 강하게 동기부여되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적 지원에 앞서 단체장 등 자치단체의 리더십의 추진의지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임
 - 지역간 협력적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은 비단 실용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화두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발전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패러다임임
- 세계적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의 위기 탈출은 지역간 협력으로 상생발전을 추구해야 함을 인식하고 기초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추진기반을 형성해야 함
 - 연계협력은 경제, 교통, 환경, 문화, 관광 등 단위사업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장 큰 효과는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시군간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을 공유해 나가야 함
 - 예컨대, 2012년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인근 시군, 예컨대 순천-보성 등과 연계협력 추진협의회 등이 구성될 수도 있음
 - 박람회 기간 밀집되는 방문객의 분산 수용을 통해 순천은 세계적 습지인 순천만 생태습지라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보성은 녹차, 꼬막 등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순환적 관광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의 각 부문과 지역이 교차하는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생활공감형 마을단위 지역발전정책 추진

- 공공기관 선진화 사업 등으로 공공부문의 몸집 줄이기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무원 조직 등 공공부문은 정책수요에 비해 여전히 비대하게 느껴지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이 부족한 실정
 - 특히 지역발전정책은 4대강 사업 등을 위시한 대규모 SOC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어 지역주민이 지역발전정책의 수혜자로 느끼기 어려운 실정
- 지역발전이란 지역, 즉 장소의 발전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발전인바, 그간에 행해진 지역발전정책들이 실제로 지역주민에게 삶으로 다가오지 못하였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2012 지역발전 추진방향 및 전략

- 이를 위해서 2012년 지역발전정책 또한 지역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을단위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공간적 범위를 마을단위로 설정하였을 때, 정책대상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적 제약을 고려할 때, 마을단위 지역발전전략은 마을단위의 자율적 주민조직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함
 - 한국에서는 이미 새마을 운동 등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참여정부와 실용정부로 이어지면서 이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음
- 기 축적되어 있는 발전의 기반을 활용하여, 마을단위의 자율적 주민조직을 활용한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음
 - 실용정부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녹색성장정책 또한 녹색생활실천에 주안점으로 두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생활실천형 마을 만들기로 추진
 - 재난·재해에 대비한 대책 또한 중앙관제 시스템에 의한 위로부터의 통제·감독·예방보다는 아래로부터의 방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과 같은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원봉사자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해나가야 함
 - 한편, 국민의 행복지수(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를 높이려면 ‘봄비지 않고 신속한 대중교통’,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인도와 골목길’ 등이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하다고 나타난 바,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교통 마을 만들기 추진 필요

□ 외국인 밀집지역별 다문화 지역정책 추진

- 한국내 외국인 관련 정책은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발전정책과는 별도로 외국인 대상 복지정책의 특성을 띠고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한국 거주 외국인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다문화정책이 복지정책이 아닌 공간정책으로서도 접근할 필요가 생김
- 외국인 밀집지역은 고급 주거지역에서 낙후된 불량주택지역, 관광거점으로 육성되는 지역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주변화되는 지역까지 유형이 매우 다양함
 - 따라서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다문화 지역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해당 밀집지역이 이색적인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을 경우, 지역의 관광명소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등이 대표적 밀집지역임
-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역사회내에 정착록하여 건강한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공간적 정책보다는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질 제공 등의 정책수요가 더 높을 것이므로 공간적 정책은 외국인 검용 안내표지판 조성 등만 고려해도 될 것임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초구 서래마을 등으로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있지만 주변화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 낙인이나 공간적 고립없이, 주류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경우임
- 마지막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지역사회내 소외, 빈곤, 슬럼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지역인 경우, 정책적 고려가 가장 많이 필요함
 - 농촌지역의 대다수 다문화 가정 밀집지역,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 등의 유형임
 -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공간정책, 외국인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의 한 일원으로 소외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도록, 상호간 문화교류 등이 다문화 축제 등의 형태로 지원되어야 함
- 이상의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다문화 지역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구축이 필요함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국적별 외국인수 등 매우 기초적인 자료만을 포함하고 있어, 다문화 공간정책적 함의를 이끌기 부족함
 -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와 국적, 밀집지역의 공간적 인프라 현황, 외국인 공동체 형성과 조직 등 구체적인 정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축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개발 교육프로그램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성과가 지방정책 수립과 적용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개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시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의정연수센터

운영방법

- 대 상 : 광역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 방 법 ① 방문교육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대상자와 교육장소, 시기를 정하고 지방자치·의정연수센터 교수진이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 ② 집합교육 : 교육 신청하여 연구원에 방문하셔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과정

- 방문교육

개 요	세 부 내 용				
기간	1일~2일				
교육 과정	지방재정력 분야	지방재정관리 혁신	고령화사회와 지방재정 운영전략 성과중심 예산제도 운용 및 활용방안 지방재정 위기와 대응방안 광특회계 운영과 지방의 대응		
	지방경쟁력 분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공공감사체계의 이해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 및 자체감사 컴퓨터활용 감사기법 감사계획 수립방법 및 감사기법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성과관리 개요와 자체평가의 이해 성과평가 지표개발의 원칙 및 방법 지표개발 실습 지표별 가중치 설정과 평가기법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제고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의 이해 지방정부의 생산성 제고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역량
		지역경제발전 분야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운영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		
		교수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대학교수 및 중앙·지방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교육비	1일과정 : 1인당 10만원 / 2일과정 : 1인당 15만원			

○ 집합교육

개 요	세 부 내 용		
기간	3일		
교육 과정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1일차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
			사업예산제도 : 사업예산 운용요령·성과예산 편성방법, 성과관리
		2일차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과 과제
			복식부기회계제도 : 발생주의 이해, 재무제표, 복식부기 재무정보 활용
		3일차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편성방법
			재정분석과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광역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지방의 대응 최근 지방재정 변화 동향		
	주민자치센터	1일차	주민자치의 이념과 철학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방법·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주민자치위원의 바람직한 역할
		2일차	마을행사의 기획과 운영·우수사례 소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3일차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례 소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도입과 활용방안		
	기후변화와 녹색공동체	1일차	기후변화가 주는 파급효과 : 자원고갈과 에너지
			기후변화와 생존위기 : 대응과 재난안전
			녹색성장의 내용과 정책방향
		2일차	탄소배출 저감사례와 적용방안 : 교통 및 도시계획
			지역에너지 자립사례와 적용방안 : 주거 및 산업
			지역녹색성장 및 에너지 실천계획
		3일차	대안모색 I : 생활 속의 녹색성장 실천사례와 적용방안
대안모색 II : 지역녹색공동체 형성 방안			
지역녹색성장·에너지 기본구상			
지역공공디자인	1일차	지역공공디자인의 이해	
		지역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커뮤니티 디자인수법 적용 방안	
	2일차	우수 지역공공디자인 사례 견학	
	3일차	국내·해외 우수사례 소개(공공시설물 디자인, 옥외광고물 정비방안)	
		지역공공디자인 개선방안	
교수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대학교수 및 중앙·지방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교육비	3일과정 : 1인당 19만원 (* 주민자치위원 2일과정 : 1인당 15만원)		

* 교육이수 실적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0조 제항 및 공무원교육훈련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277호)에 따라 '상시 학습 수료'로